



 신항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http://www.emerics.org/ 2018. 09. 21. 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 및 평가 작성 이정은 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동아시아팀)
--	---

- 2018년 9월 5일 유럽집행위원회는 일본이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부합하는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한다는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승인하기 위한 내부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
- 이번 발표는 2018년 7월 17일 양국의 상호 데이터 역외 이전 합의에 대한 후속 절차로, 이후 유럽 개인정보보호이사회 의결 검토 및 EU 회원국 대표들의 허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정성 결정이 승인됨.
 -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인정은 해당 국가가 EU와 동등한 개인정보보호 체제 및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이 평가를 통과한 국가의 기업들은 EU 역내 개인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음.¹⁾
- 그동안 일본정부는 GDPR 제정에 대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포함한 법·제도정비와 EU 집행위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음.
- 일본은 2015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였으며(2017년 5월 30일부터 전면시행), 이에 기반하여 GDPR 요건과 상응하는 수준의 규제조치를 도입·진행하였음.
 - 법 개정을 통해 △독립된 제3자 데이터보호기관 설립(2016년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5,000인 이하의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도 개인정보취급 사업자 규정) △월경 데이터 이전에 대한 (데이터 사업자의) 권한 제한 등이 도입됨.
 - 2017년 1월 적정성 우선 평가 대상국으로 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이 지정된 이후 일본은 GDPR 수준에 맞추기 위해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는 한편, 적정성 인정 승인을 위한 협상에 돌입함.
 -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형태의 해결책’을 통해 EU의 데이터 보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EU에서 이전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장치(safeguards)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2018년 2월, 4월) 및 보조규정(補完的ルール, 2018년 9월)을 발표
 - 2016년 4월 이후 일-EU 양국은 개인데이터의 원활한 상호 이전을 목표로 대화를 진행해

1) 적정성 결정 외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자사가 GDPR 기준에 맞는지 EU에 검증받는 방법인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BCR)’ 및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SCC)’ 등이 존재함. 현재까지 부분 인정(partial adequacy decisions)을 받은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여 총 12개 국가가 유럽집행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았음. 적정성 인정을 받은 12개국은 안도라, 아르헨티나, 캐나다, 페로제도, 건지섬(Guernsey), 이스라엘, 맨 섬(Isle of Man), 저지섬(Jersey), 뉴질랜드, 스위스, 우루과이, 미국임.

왔으며, 2017년 7월 17일 일본은 최초로 EU와 상호 간 정보보호 체제의 적정성을 인정하는 협의를 체결하였음.

- 양국이 상호 데이터 역외 전송을 허용할 정도로 대등한(equivalent) 개인정보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인식에 합의하였으며, 2018년 내 적정성 인정 프로세스 완료를 목표로 국내 절차를 완료할 것에 합의함.²⁾

표 1. ‘가이드라인’에 나타나는 일본정부의 추가 조치

항목	해당법령	수정 내용
필요배려개인정보 ³⁾	2조 3항	필요배려개인정보(민감정보)의 범위 확대 - GDPR에서 특별한 유형의 개인정보(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로 정의되는 성적취향, 노동조합 등에 대한 정보도 필요배려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취급
보유개인데이터 ⁴⁾	2조 7항	보유개인데이터 범위 확대(기간한정 예외조항 삭제) - EU에서 이전된 개인데이터에 대해서는 각주의 ①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에 관계없이 보유개인데이터로 취급(기존에는 6개월 이내에 삭제 예정인 개인데이터는 보유개인데이터로 취급하지 않았음.)
이용목적 특정	15조1항 · 16조1항·2 6조1·3항	데이터 취득 시 이용목적을 확인·기록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이용하도록 조치 - EU에서 이전된 개인데이터에 대해서는, 취득 시 확인한 이용목적의 범위 내로 그 목적을 제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해당 개인데이터를 이용하도록 함.
역외 제3자에게 정보 제공 제한	24조·규칙 11조의2	일본에서 EU 외 제3국으로 개인데이터가 재이전하는 경우의 보호수준 강화 - EU에서 이전된 개인데이터에 대해 본인동의에 따라 재이전하는 경우 본인이 동의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목적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익명가공정보	2조 9항· 36조 1·2항	개인데이터의 익명가공처리방식에 대한 정보 제거 - EU에서 이전된 개인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익명가공처리 하는 경우, 가공방법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고 재확인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 EU에서는 가공방법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을 경우, 안전하게 분리하여 보관할 경우에도 재식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익명화되었다고 간주하지 않음.

주: 해당법령은 일본 개정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법령

자료: 個人情報保護委員会(2018.9)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に係るEU域内から十分性認定により移転を受けた個人データの取扱いに関する補完的ルール」; (2018.4) 「EU域内から十分性認定により移転を受けた個人データの取扱い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 (2018.2.9.) 「EU 域内から十分性認定により移転を受けた個人データの取扱いに」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の方向性について 참고하여 정리

- 2) 「熊澤春陽個人情報保護委員会委員 `ベラ・ヨウロバー欧州委員会委員(司法・消費者・男女平等担当)による共同プレス・ステートメント」(2018.7.17.).
- 3) 필요배려개인정보(要配慮個人情報): 인종, 신념, 사회적 신분, 병력, 범죄경력,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실 및 기타 본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편견 및 기타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그 취급에 특히 주의를 요하는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 2조 3항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를 뜻함.
- 4) 보유개인데이터: 보유개인데이터는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데이터’로, 사업자가 공개, 내용의 수정, 추가, 삭제, 이용의 중지 및 제3자에게 제공 중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개인데이터를 뜻함. 보유개인데이터에 대해서는 개인으로부터의 공개 및 정정 요청 등에 응할 의무(자기정보통제권: 自己情報コントロール権)가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개인데이터로 인정하였음. ① 해당 데이터의 존재 여부가 밝혀질 경우 공익 또는 기타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데이터 ② 6개월 이내에 삭제되는 데이터의 경우

- 일본은 정부의 빠른 대응으로 GDPR 도입 이후 비교적 단기간에 적정성평가에 통과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며, 현재 적정성평가 심사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도 일본의 대응조치를 참고할 수 있음.
- 적정성 결정이 최종 승인될 경우, 일-EU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허용되면서 기업의 규제심사를 위한 시간·비용 절약 등의 효과가 기대됨.
 - 우리 정부도 GDPR에 대응하여 국내법 개정을 포함한 조치를 진행 중에 있으나, 적정성 심사 통과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됨.
 - 2018년 8월 30일 ‘데이터 제3국으로의 재이전 제한’ 등 신설조항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이는 적정성 평가에 유용한 근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익명가공정보(비식별조치정보)의 입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및 권한 강화 등의 과제도 남아있기에 평가에 대한 우려도 다수 존재함.
 - EU 규제와의 상이함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이 도입한 ‘가이드라인’ 및 보조규정, EU 데이터에 대한 보호장치 등은 우리나라도 참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EMERiCs**